



금융위원회		<b>보 도 자 료</b>		금융감독원	
보도	2017. 8. 28(월) 배포시	배포	2017. 8. 28(월)		

책 임 자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담 당 자	홍 상 준 사무관 (02-2100-2612) 박 보 라 사무관 (02-2100-2613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상 춘(02-3145-6770)		대부업감독팀장 신 동 우(02-3145-6774) P2P대출감독대응반 박 형 근(02-3145-6780)
	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 임 민 택(02-3145-8260)		대부업검사2팀장 진 태 중(02-3145-8267)

## 제목 :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.('17.8.29일부터 금융위·원 감독 개시)

### 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-

◆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'17.8.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여 금융위·원의 감독근거를 명확화

\*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'18.3.2일부터 완전시행

- P2P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업체의 향후 금융위 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

## 1 추진 배경

- 'P2P대출'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\*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,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이 점차 증대

\* P2P대출잔액(추정) : ('16.6월) 969억원 → ('16.12월) 3,106억원

- 다만, 現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상황

- 이에 따라,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'17.8.29일부터 시행함

\* ('16.11월) 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 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금융위 등록·감독 발표  
→ ('17.2월)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→ ('17.7월) 국무회의 의결

## 2 주요 개정 내용

### 1. P2P대출 관련 정비사항

#### ①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(승 §2의4)

- P2P업체(플랫폼)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'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'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

⇒ 금융위 등록시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·원의 직접적 감독 가능

※ 현재 모든 P2P대출 시·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(금감원 추정)

#### ②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 제한(감독규정 §10)

-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의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업자등의 규제우회·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,

⇒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등간 겸업을 제한하고 각 업태간의 구분을 명확화

※ 참고 : 기존 대부업자의 규제우회·신용질서 저해 가능성

- ①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→ 유사수신 금지(유사수신법) 및 공모사채 발행 제한\*(은행법) 우회 우려

\* 은행법 우회소지를 감안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의 공모사채 발행을 제한

- ② 기존 대부업자가 대출모집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→ 사실상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 활용

- ③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가 P2P대출업을 겸업 → P2P 대출업 본연의 취지와 무관하게 NPL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를 활용

### ③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\* 적용 완화(승 §4의4)

\*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여야 함

- P2P업체(플랫폼)의 영업에 종속되어 있는 P2P대출의 형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,

\* ❶ P2P플랫폼에서의 매칭된 건에 연결되어 자금제공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므로 대부업자 입장에서 대출채권에서 수익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음

❷ 통상의 대부업과 같이 총자산한도를 적용하는 경우, 건전성 등과 무관하게 P2P대출영업이 제한되어 불합리

⇒ P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시,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

※ 대출채권 전부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하여야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 우회 가능성을 방지

## 2. 그밖의 정비 사항

### □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(§2의10)

- 대부업·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\*(16.7.25일 시행)에 따라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제한되는 불합리\*\*를 방지하기 위해,

\* 이용자 보호 위해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사업, 사행산업 등을 금지(법 §3의5②)

\*\* 전기통신사업법령 해석(미래부) 상 단순 홈페이지 운영도 전기통신사업에 포함될 소지

⇒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\*

\* 다만, 전기통신사업 중 문자발송업, VAN영업과 PG영업은 대부업 겸업 허용시 이용자 보호 위해 우려가 있어 개정 법규에서도 계속 겸업을 제한

- 이밖에 ❶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·시행령 위임체계 정상화, ❷16.7.25부터 감독대상에 포함된 매입채권추심업자 대상 업무 보고서 서식 확충 등 기타 보완 사항 정비

## 3 향후 유의 사항

- (P2P업체)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

-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(3억원)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(금감원) 등록할 필요

-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'18.3.2일부터 금융위(금감원) 등록없이 P2P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되므로 유의

-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(금감원) 등록 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

- (이용자) P2P대출에 투자하시거나 P2P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(금감원)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

- 유예기간('17.8.29~'18.3.1일) 중에는 금감원 “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”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가능

\*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(<http://fine.fss.or.kr>)에서 [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] 클릭

- 특히, 유예기간이 경과한 '18.3.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·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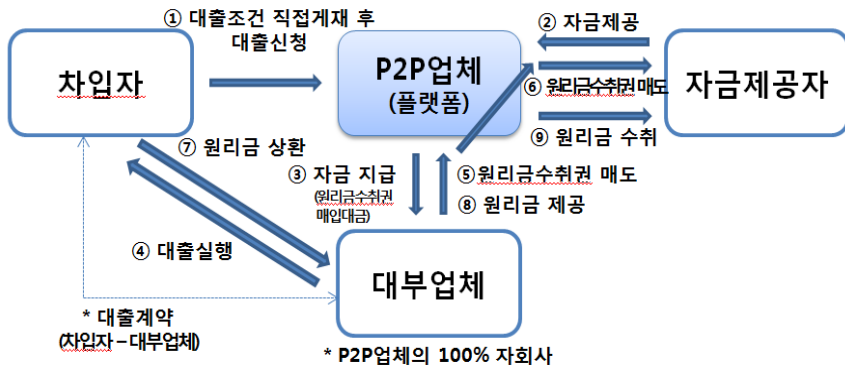
\*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위·금감원의 검사·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음

## 참고 1

## 대부업 법규상 규율 대상인 P2P대출 영업형태 예시

- 인터넷에서 차입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하는 **P2P업체(플랫폼)**가 **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(통상 100%자회사)**를 **별도 설립하는 형태**

<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대출 영업 형태 도식 >



### ① 차입자는 P2P업체\*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신청

\* 자금제공자와 차입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여 양자를 Matching

### ② 자금제공자는 차입자가 게재한 조건을 토대로 자금제공 결정

### ③ P2P업체는 모집된 자금을 연계되는 대부업체\*로 전달

\*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

### ④ 대부업체 대출 실행

### ⑤~⑥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의 원금·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도

\* ⑤에서부터 ⑥까지의 과정은 동시에 진행

### ⑦~⑨ 차입자 원리금 상환에 따라 자금제공자는 수익 수취

⇒ 금번 대부업 법규 개정을 통해 P2P업체와 연계하여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 근거를 정비

## 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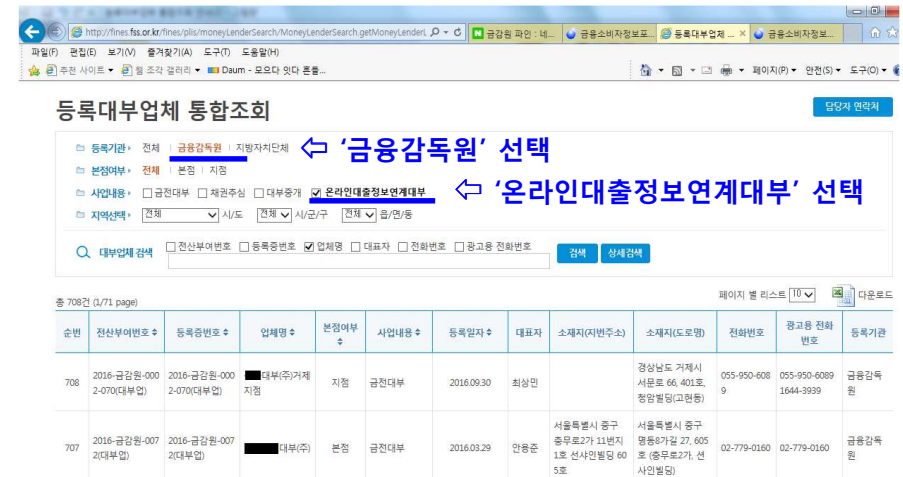
##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접속 방법

- ① <http://fine.fss.or.kr>(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)로 접속하여 “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” 클릭



- ② 통합조회창에 접속 후, 등록기관에는 ‘금감원’(금융위)란에 체크, 사업내용에는 ‘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\*’란에 체크한 후 검색

\*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 등록 조회는 ‘17.8.29(화)’부터 가능하며, 등록 심사 기간 감안 시 9월말~10월초부터 등록 완료 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



### 참고 3

### P2P 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- **(투자한도) 개인 투자자**는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**1천만원, 소득요건\*** 구비자는 **4천만원**

\* ①이자·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, ②사업·근로소득이 1억원 초과

- **법인 투자자와 개인 전문투자자\***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**별도의 투자한도 없음**

\* ①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, ②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으로, ③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

- **(영업행위) P2P업체와 자회사인 대부업체(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)**는 **P2P대출에 투자자로 참여 금지**

※ **(조항 취지)** P2P업체들이 투자자 모집 완료 이전 대출상품을 실행(先대출)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

- ①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대출을 실행시(선대출), 업체가 모집 미완료분만큼 자기자금을 투자한 것이 되므로 가이드라인 위반
- ② 선대출 후 모집이 결국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, P2P업체는 모집되지 않은 부분만큼 투자한 결과가 되므로 가이드라인 위반 지속

- **(투자금의 별도 관리) 투자자의 자산을 업체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**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·신탁(업체횡령 등 방지)

- **(정보공시) 투자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**

- **(상품)** 차입자의 신용도, 자산·부채 현황, 소득·직장 정보, 연체기록,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

\* 법인의 경우 결산재무제표, 담보대출의 경우 감정평가서 등 추가 요구

- **(업체)** 거래구조, 누적 대출액, 대출잔액, 연체율, 자기자본 등의 정보를 플랫폼에 게재